

동네 상권 살리려면 사람들이 걷고 머물고 쉴 수있게 해야

서비스 역량 제고 교육·우수 점포 상품 마케팅 등 지원
온라인·대형 매장 경쟁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 키워야

동네 상권이 몰락하고 있다. 스타벅스, 일부 유명 제과·음식 체인, 편의점, 핸드폰 대리점 등이 아니면 소규모 점포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삭막한 도시에서 걷는 시민이 사라지고, 매력적인 공간도 없어 쉬거나 머물며 활동하는 시민도 급감하면서 소비 행위 자체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젊은층 위주 온라인 판매에 익숙해지면서 의류, 공산품에서 과일, 식료품 등에 이르기까지 핸드폰 하나로 배달하면서 더 더욱 설 땅이 없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 6월 기준 20조683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뒤 계속 그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비어 있는 점포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단순 자금 대출이 마무리되는 동안 동네 상권의 경쟁력이 급락해 자체적으로는 소생하거나 대규모 온라인 업체 등과 경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동네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도시 공간적인 대책과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상시 교육 프로그램, 단계별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자금 지원이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높다는 지적이 다.

◇걷는 사람 없는 도시·소비 행위 있을 수 없어 =도시를 걸으며 소비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자동차로 신속하게 목적지를 오가는 것이 당연해졌고, 골목 곳곳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걷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어 불편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 충장로, 상무지구, 수완지구, 용봉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 등 일부 중심거리의 밤이나 주말 등 특정시간대에만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도심에 공원, 광장,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유동인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배치하고, 차량을 배제하거나 통제해 말 그대로 사람들이 거닐 수 있는 공간을 우선 만들 필요가 있다. 도심에 머무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카페, 음식점, 기념품점, 의류점 등에 들러 소비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남로, 중앙로 등 상징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거나 차도를 줄여 인도의 폭을 넓혀 다양한 행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형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국장은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려해도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을 할 정도"라며 "도시 곳곳이 사람들로 붐비고 이들이 소비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주 금요일 상공무원 일대에서 열리는 동네

장터와 같이 상권별로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별성 갖고 고객 끌 수 있는 매력 갖춰야=소상공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대형 마트나 할인점 등과 차별성을 갖고, 고객을 끌 수 있는 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언제나 물건을 살 수 있는 24시간 편의점, 다품종 저가 전략을 내세운 다이소, 거의 모든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 대형 마트 등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까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너무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격, 서비스, 매력, 개성 등에서 한 가지라도 우월한 것이 있어야 하며 이를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야 지속적으로 점포를 유지할 수 있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 대표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상인들과 소통을 통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인들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곧바로 퇴출되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 자금 지원보다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략 필요=조종래 광주·전남 중소기업진흥청이 지난 2023년 1월 취임과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무역협회 등 30개 지원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종합 서비스에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협의회를 가동하면서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해에만 70여건, 올 상반기 40여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창업·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상환 기일을 연장해주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등 단순했다. 자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매출 규모·지속가능성 등을 판단해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기관들이 관련 정책·사업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인, 매출 1억원 미만, 5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등으로 구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일성 총장로 1·2·3 상인연합회 회장은 "총장로는 무엇보다 주차장, 화장실 등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며 "이와 함께 소규모 점포들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가질 수 있는 정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호남 지역 군 공항 이전의 한계와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 제공>

공항이전 연말이 '골든타임' ... 민·관·정 함께 돌파구 찾는다

박균택 의원 주도 '군공항 이전 한계와 대책 토론회' 성료
6일에는 광주시청서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연석회의 예정

광주시가 올 연말을 민간·군 통합 이전 사업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민·관·정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영·호남지역 군공항 이전 한계와 대책' 토론회에선 서남권 관공항공 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주도로 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민형배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 주관했다.

양철수 광주연구원 매력도시연구실장은 이날 '광주 민간·군통합 무안 통합이전과 서남권 관공항공 육성방향'의 주제발표에서 무안통합공항 건설의 당위성, 서남권 거점공항 부재에 따른 영향, 소음영향 분석 등 통합공항 조성을 위한 폭넓은 사례를 들어가며 발표했다.

양 실장은 "무안공항이 살아남기 위해선 새만금 공항 등 신공항 건설의 착공 속도가 불기 전 서남권 관공 항공으로 자리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의원

들도 "무안공항 활성화는 호남의 숙원사업이자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서남권 통합 신공항으로 광주와 무안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광주와 전남 공동발전 비전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은 "광주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이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공항 등 여기저기 생겨나는 공항 때문에 무안통합공항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 연말까지 무안통합공항 활성화를 속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연석회의'를 연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주최하는 이날 회의에는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단체장, 상공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민간·군 공항 이전 및 유치로 예상되는 경제 효과와 광주·전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광주에서는 8개 지역구 의원 전원과 강기정 광주시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남에선 10개 지역구 의원 중 최다선인 박지원

(해남·완도·진도) 의원과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지낸 신정훈(나주·화순) 의원,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 조계원(여수) 의원 등 5명이 참석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주철현(여수갑)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 김산 무안군수는 현재까지 불참의사를 표명한 상태로, '반쪽 회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는 정치권 협조와는 별개로 무안주민과의 직접 소통 및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공직자 30명을 10개조로 나눠 6일부터 매일 무안군 9개 읍·면의 마을회관, 상가, 시장, 교회 등을 찾아다니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음 대책 등에 대해 무안군민을 직접 만나 소통한다. 또 무안군 땅은면에는 군민과의 소통거점인 '열린대화방'을 설치·운영한다.

시는 10월부터 무안군민과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군공항 무안 이전 찬반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광주시가 최선을 다하고 정치권, 시민사회가 힘을 보탠다면 공항 이전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국가 첨단인재 양성의 산실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전남대학교

| 수시 입학원서 접수 | 2024. 9. 9.(월) 09:00 ~ 9. 13.(금) 18:00
| 수시 합격자 발표 | 2024. 12. 13.(금) 15:00
※ 전남대 입학과 안내전화 062-530-4731~4735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